

與 “北 도발, 단호히 대처” 강경모드 전환

“지금은 초당적 대응 필요”
통합당에 ‘원 구성 완료’ 촉구
오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21대 국회 원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속에서 천불이 난다,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무익한 보이콧을 멈추고 국정정상화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요즘 통합당이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20대 국회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북한의 도발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런 행위로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은 어렵게 쌓은 남북 간 신뢰를 허무는 이런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도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국회는 남북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단호하다. 일하는 국회다. 통합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다. 통합당이 국회 정상화를 머뭇거리수록 국민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형석 최고위원도 “북한 당국은 이성적 판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도 즉시 모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관계를 악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와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도 함께한다.

송갑석 대변인은 “남북 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상임위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준 동의안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와대나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 시켜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SNS에 단순한 실망을 넘어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했기 때문이고, 결과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R&D투자 공공성 강화해야”

과학기술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은 1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R&D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위 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용빈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당연한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OECD 34개국 중에 한국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6위, 삶의 질 수준은 29위,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는 34위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5·18 관련자 보상법안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17일 “5·18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관련 법률 발의를 위해 지난 16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월 단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5월단계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기에,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정치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보건복지부 질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방의 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승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희재, 전라선 철도 조기 직선 고속화 촉구

국토위 당정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라선 철도의 직선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확정된 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원 18명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1·2차관,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국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형(K)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K뉴딜의 일환으로 전라선 철도의 직선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 와중에도 ... 통합당 “복귀 못 해”

“민주당 법사위 포기하면 갈 것”... 중진 일부선 참여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17일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사의를 밝힌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해 놓고 업무 보고를 받느니 추경을 하느니 하면 점점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재선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에 중대 위기가 도래한 만큼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해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국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3대 외교안보 상임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장제원 의원은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김기현 의원은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으나, 이제 각 상임위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환불 추정 포함 검토”

당정청 협의회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고의사기! 허위인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RE, SGI서울보증, AXA AXA이머티리얼,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